

부 록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참고의견



참고의견은 소관부처 의뢰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결과 법령안에 직접적인 부패유발요인은 없으나, 법령안 체계·자구수정, 타 법령과의 중복·모순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소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령 등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근거한다.

2012년 위원회는 192개의 법령안에서 47건의 참고의견을 도출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 **평가대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5>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 ⑤ (생략)

현황 및 문제점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공급토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토록 함

※ 조성토지 공급방식

-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법. 상업용지 등 **영리목적 판매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함

- **추첨제** : 공급가격을 미리 공시하고,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하는 방법.
산업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 등이 대상
- **수의계약** : 공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적격자에 공급하는 방법
- **추첨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음**
 - 개정안의 추첨에 의한 토지공급 방식은 경쟁입찰에 따른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 및 특정 수요자에 대한 공급혜택 집중을 막기** 위한 것으로,
 - 그 대상도 **공공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하고 있음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타 법령*에서도 **일정규모(330㎡) 이하인 경우 추첨에 의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도 주택용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추첨에 의해 공급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에, 단독주택용지는 **토지 규모와 상관 없이 추첨에 의해 공급**토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 및 형평에 맞지 않음**
- * 단독주택용지 관련 입법사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참고의견

- 추첨에 의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를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로 제한



개선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9.21, 일부개정)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 (생략)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 ⑤ (생략)

■ **평가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황

- '12. 2월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악의·상습 채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도입

〈 최근 5년간 채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채불액	8,400억원	9,500억원	1조 3,400억원	1조 1,600억원	1조 900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	25만명	30만명	27만6천명	27만8천명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채불사업주 사망 등과 같이 명단공개 실시성이 없어 채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문 제 점

- 개정안 제23조2 제2호는 ‘폐업’을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 위장 폐업으로 임금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위장폐업 후 체당금(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업체대표를 구속(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11.)

- 단순히 체불사업주가 ‘폐업’만 하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단순히 체불사업주가 폐업한 경우가 아닌 폐업으로 인하여 명단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 규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생략)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의견

- 체불사업주 폐업 등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단공개를 제외
-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

개선결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 6. 21. 개정)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43조·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채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법률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4. (생략)

②~③ (생략)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황

- 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지정기관의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제정안은 제13조에서 녹색건축물 전문기관의 지정대상기관을 정하면서(제1항), 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인가취소,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기존의 이익을 박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사항으로 그 근거 및 요건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나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녹색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 제23조 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음

참고의견

- 취소절차 및 요건은 법률에 우선 반영

개선결과

- 추후 법률 개정시 반영예정

- **평가대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3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간, 지정취소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현 황

-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0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센터의 지정기간, 지정취소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센터의 지정취소는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서 규율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인 개정령안에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의견

- 개정안에서 센터의 ‘지정취소’를 삭제하고, 향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지정취소의 근거 및 요건을 규정

개선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2.1, 전부개정]

제3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충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대상 :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52조의2(건강검진의료기관)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 ~ ③ (생략)

현 황

- 선원법(2012.1.17. 개정) 제87조제1항에는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

- 금회 개정(안)에 제52조의2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의료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

문 제 점

- 신설 조문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제1호 및 제2호에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됨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방적·임의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어 의료질서의 문란과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음



- ※ 제1호(연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비교적 선원으로서의 근무 강도가 경미한 관계로 ‘의원급’ 이상의 모든 의원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제2호(그 밖의 선원)의 경우는 좀 더 세부적인 건강진단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국가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참고의견

-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

개선결과

선원법 시행규칙(2012. 5. 18. 개정)

제52조의2(건강검진의의료기관)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 그 밖의 선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해당 검진기관과 동등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 **평가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허가를 신청한 자(법인이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황

-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을 허가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0.10.26)에서 인·허가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

-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방식)’로 전환하도록 하고, 주요 네거티브 전환 추진과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허가 의무화를 선정

-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의 허가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법 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문 제 점

- 법인의 경우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허가를 하여야 함
 - 개정법률(안)은 허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 대한 등록결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법인 자체는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인이 허가·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조제5호

참고의견

- 등록결격 사유 판단 대상에 법인도 포함
 - 허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등록결격 여부도 판단하도록 함**

개선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개정)

제4조(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평가대상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
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 석탄공사

3. **광해방지부담금의 수납,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및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 상황에 대비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의 사장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개정법령(안)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하 ‘광해방지부담금’)의 수납 업무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광해 방지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의 회계사무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나,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개정(‘11.12.28)

- 광해방지부담금도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항목으로*** 그 수납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고 있음에도(제8조제1항제1호) 이를 다시 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3조(회계의 운용·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 7. ~ 14. (생략)
- ② ~ ③ (생략)

참고의견

-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세입의 수납에서 광해방지부담금의 수납을 제외

개선결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2012. 10. 29. 개정)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다.

1. 한국석유공사 : 특별회계의 세입(「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한국광해관리공단 : 특별회계의 세입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수수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수수료(제2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대기업	50만원
중견기업	30만원
중소기업	15만원

현황 및 문제점

- 지경부장관은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50만원, 중견기업 30만원, 중소기업 15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부과
- 수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업규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수료 부과 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인증신청사업자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하여 수수료 부과과정에서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참고의견

- 수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업규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 8. 31. 개정)

제2조의2(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기준·절차 등)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인증 수수료(제2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수수료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50만원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0만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5만원

■ 평가대상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별표 1의2]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총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나. 진단장비(각 1대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속계 2) 다항목 측정기 3) MLSS meter 4) 자동시료채수기 5) 진동측정분석기 6) 소음측정기 7) 회전계 8) 디지털압력계 9) 접지저항계 10) 절연저항 측정기 11)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12) 전력품질분석기 13) 유량계 14) 실험분석장비(방류수질기준 항목) 15) CCTV 카메라 16) 실사출력플로터 17) 연막시험용배풍기 18) 이동식 유량계(3대 이상) 19) 공기압 시험기 	<p>□ 수처리 진단</p> 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또는 화공, 기계, 전기 관련학과 박사 2)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화공,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나.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2)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사 3) 전기, 전기공사 기사 다.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2)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산업기사 3)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p>□ 하수관거 진단</p> 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사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 2) 수질환경 나. 다음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 2) 수질환경

비고 :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립연구 기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환경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기술인력 나항제1호(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1년 이상 분석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동 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생태독성분석항목은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지 않고 측정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현 황

-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 공공하수도는 2010.12.31.현재 465개소

구 분	개소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인원
계	465	871,107	5,360
자치단체 직접 운영	147	370,115	1,718
민간위탁	318	500,992	3,642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의 박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구분

문 제 점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학력 등 자격제한을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학력차별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될 우려
- ※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선택과목에 고교이수 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을 추가 (연합뉴스, 2011.12.30.)
- ※ 모든 채용과 임금수준 책정, 교육과 훈련, 인사 배치와 승진, 해고와 퇴직 등에 있어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이나 기회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참고의견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를 포함

개선결과

하수도법 시행령 (2012. 12. 20. 개정)

[별표 1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장비(각 1대 이상)

- 가. 유속계
- 나.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 다.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라. 자동시료채수기
- 마. 진동측정분석기
- 바. 소음측정기
- 사. 회전계
- 아. 디지털압력계
- 자. 접지저항계
- 차. 절연저항 측정기
- 카. 포터블 캘리브레이터
- 타. 전력품질분석기
- 파. 유량계
- 하. 실험분석장비(방류수질기준 항목)
- 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너. 연막시험용배풍기
- 더. 이동식 유량계(3대 이상)
- 러. 공기압 시험기

2. 기술인력

- 가. 수(水)처리 진단 분야
 - 1)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가) 환경, 화공, 기계, 전기 관련학과 박사

- 나)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화공, 건설기계, 산업
기계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기술사
- 2)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생물공학 기사
 - 나)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사
 - 다) 전기, 전기공사 기사
- 3)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나)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산업기사
 - 다)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4) 환경측정분석사 1명
- 나. 하수관거 진단 분야
 - 1)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
 - 2) 토목 및 수질환경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비고

1.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 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3)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의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2)의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환경측정분석사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2)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색 인

■ 평가규정별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지정	준수부담의 적정성	30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부	부담 · 환급	준수부담의 적정성	34
3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39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42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재청	재산관리 · 처분	특혜발생가능성	45
6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지정	특혜발생가능성	47
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재산관리 · 처분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50
8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53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산림청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55
10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58
1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0
1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2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접근성 · 공개성	66
14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위임 · 위탁 · 대행	접근성 · 공개성	68
1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부담 · 환급	예측가능성	70
1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74
17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부	재산관리 · 처분	이해충돌가능성	77
1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81
19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부담 · 환급	접근성 · 공개성	84
20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87
2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89
22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경찰청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92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94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부담 · 환급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87
2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01
26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05
27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경찰청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접근성 · 공개성	108
28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0
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3
30	수도법 개정안	환경부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16
3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8
3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20
3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23
34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위임 · 위탁 · 대행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125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산림청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27
36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130
3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위임 · 위탁 · 대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33
38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청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이해충돌 가능성	135
39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 심의	접근성 · 공개성/예측가능성	139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42
41	수도법 개정안	환경부	심사 · 심의	접근성 · 공개성	145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147
43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49
4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151
4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지정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54
4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158
47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지정	특혜발생 가능성	161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지준	페이지
4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4
4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림청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7
5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제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9
51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제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172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접근성 · 공개성	175
53	사도법 개정안	국토해양부	제재	접근성 · 공개성	177
54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0
5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총리실	제재	접근성 · 공개성	183
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5
5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8
58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재산관리 · 처분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91
5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재청	재산관리 · 처분	특해발생가능성	194
6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196
61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방부	재산관리 · 처분	이해충돌가능성	199
6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위임위탁의 적정성	203
63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	단속 · 조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206
6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단속 · 조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09
65	고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	법무부	보수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12
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보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15
6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19
6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4
6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6
70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9
7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지식경제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42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7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총리실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44
7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247
74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청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250
75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76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77	전기공사업법	산업자원부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79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59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59
8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83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84	전기공사업법	산업자원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8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86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8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271
8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271
89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0
90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5
9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안전행정부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290
92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지원 · 보상	특혜발생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4
93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원 · 보상	특혜발생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4
94	지방재정법	안전행정부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299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95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299
96	지방재정법	안전행정부	지원 · 보상	제재규정의 적정성	301
97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301
9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99	고등교육기관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0	대학설립운영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1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2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3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4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5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09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0	식품위생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2	건축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6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1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2	연안관리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4	주택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5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6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7	하천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8	항만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9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30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31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3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안(국세청)	국세청		예측가능성	314
133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관세청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16
134	통일부 '12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안	통일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18
13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조달청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320
136	통계교육원 학칙 개정안	통계청		특혜발생가능성, 접근성 · 공개성	322
137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검찰청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24
138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안	병무청		특혜발생 가능성	326
139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방위산업청		제재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329
140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청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31
141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개정안	국가보훈청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333
142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335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43	천연기념물 경산의 삼설개 관리지침 개정안	문화재청		준수부담의 적정성	337
144	산업재산권 판례 성석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특허청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39
145	일반 기능 계약직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 지침 개정안	해양경찰청		제재규정의 적정성	340
146	인명구조사 운영규정 개정안	소방방재청		이해충돌가능성	342
14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46
148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48
149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접근성·공개성	350
150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지원 조례	강원도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52
151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강원도		이해충돌가능성	355
152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조례	강원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57
153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59
15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공개성	362
15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충청남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365
15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충청남도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368
157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충청남도		이해충돌가능성	371
158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74
159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충청남도		특혜발생 가능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77
16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379
161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산광역시		특혜발생 가능성	381
162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82
163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강원도		준수부담의 적정성	384
164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86
165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강원도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388
166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90

연번	평가규정	소관부처(기관)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67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접근성 · 공개성	394
168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96
16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98
170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제재규정의 적정성	400
171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402
172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	공직유관단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14
173	인사관리규정	공직유관단체		제재규정의 적정성	416
174	건설자문 위원 및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	공직유관단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418
175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공직유관단체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20
176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공직유관단체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22
177	여신심사합의체 운용지침	공직유관단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424
178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	공직유관단체		이해충돌 가능성	426
179	감사규정	공직유관단체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429
180	부보금융기관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직유관단체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432
181	영업운영 업무기준	공직유관단체		제재규정의 적정성	433
182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공직유관단체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35
183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공직유관단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38
184	계약업무 관리세칙	공직유관단체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40
185	회계요령	공직유관단체		제재규정의 적정성	442
186	회계규정	공직유관단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43
187	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	공직유관단체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445

■ 소관부처(기관)별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	강원도	강원도 대관령 야외음악당 관리 및 지원 조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52
2	강원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해충돌가능성	355
3	강원도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57
4	강원도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준수부담의 적정성	384
5	강원도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86
6	강원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388
7	검찰청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24
8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재규정의 적정성	400
9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지원·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공개성	108
10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심사·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해충돌 가능성	135
11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단속·조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206
12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9
13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접근성·공개성	66
14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접근성·공개성	175
15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수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15
16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14
17	공직유관단체	인사관리규정		제재규정의 적정성	416
18	공직유관단체	건설자문 위원 및 설계변경업무 세부 운영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418
19	공직유관단체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20
20	공직유관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특혜발생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22
21	공직유관단체	여신심사합의체 운용지침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424
22	공직유관단체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		이해충돌 가능성	426
23	공직유관단체	감사규정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429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24	공직유관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432
25	공직유관단체	영업운영 업무기준		제재규정의 적정성	433
26	공직유관단체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435
27	공직유관단체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38
28	공직유관단체	계약업무 관리세칙		예측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40
29	공직유관단체	회계요령		제재규정의 적정성	442
30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443
31	공직유관단체	자산관리규정 시행규칙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445
32	관세청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16
3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172
34	교육과학기술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35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기관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3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37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38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39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40	국가보훈청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개정안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333
41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접근성 · 공개성	183
42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44
43	국방부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이해충돌가능성	77
44	국방부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0
45	국방부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이해충돌가능성	199
46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안(국세청)		예측가능성	314
47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담 · 환급	준수부담의 적정성	34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48	국토해양부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39
49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지정	특해발생가능성	47
50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담 · 환급	예측가능성	70
51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담 · 환급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87
52	국토해양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20
53	국토해양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151
54	국토해양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정	특해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54
55	국토해양부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지정	특해발생 가능성	161
56	국토해양부	사도법 개정안	제재	접근성 · 공개성	177
57	국토해양부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0
58	국토해양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19
59	국토해양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247
60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61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62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271
63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271
64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65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66	국토해양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67	국토해양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68	국토해양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69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0	국토해양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71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2	국토해양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3	국토해양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4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5	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6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7	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8	국토해양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79	국토해양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80	국토해양부	하천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81	국토해양부	항만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82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정	준수부담의 적정성	30
83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74
84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196
85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예측가능성, 위임위탁의 적정성	203
86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59
87	농림수산식품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50
88	농림수산식품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58
89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0
90	농림수산식품부	가족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담 · 환급	접근성 · 공개성	84
91	농림수산식품부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05
92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8
93	농림수산식품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23
94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130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95	농림수산식품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8
96	농림수산식품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산관리 · 처분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91
97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단속 · 조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09
98	농림수산식품부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 개정안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335
9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98
100	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재산관리 · 처분	특해발생가능성	45
101	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재산관리 · 처분	특해발생가능성	194
10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103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10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개정안		준수부담의 적정성	337
10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42
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53
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87
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89
10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심사 · 심의	접근성 · 공개성/예측가능성	139
110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158
1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185
1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6
11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1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11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117	방위산업청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제재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329
118	법무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	보수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12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19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안		특혜발생 가능성	326
12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2
12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01
12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3
12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42
12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 심의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49
125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2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48
12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접근성 · 공개성	350
128	부산광역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381
129	부산광역시	성남시 식물원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82
130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55
131	산림청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접근성 · 공개성	68
132	산림청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125
133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27
134	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4
135	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지정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7
136	산림청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250
137	산업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138	산업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139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46
1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379
141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산관리 · 처분	접근성 · 공개성	256
142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65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43	소방방재청	인명구조사 운영규정 개정안		이해충돌가능성	342
144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개정안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31
145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290
146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원 · 보상	특혜발생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4
147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299
148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원 · 보상	접근성 · 공개성	299
149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	지원 · 보상	제재규정의 적정성	301
15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5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접근성 · 공개성	394
15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96
1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402
154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320
155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0
15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 보상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85
15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 보상	특혜발생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4
15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301
159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42
160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61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62	지식경제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63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6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365
16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368
166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해충돌가능성	371

연번	소관부처(기관)	평가규정	업무유형	평가기준	페이지
167	충청남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374
168	충청남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특해발생 가능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377
169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특해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59
170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특해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 · 공개성	362
171	충청북도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390
172	통계청	통계교육원 학칙 개정안		특해발생가능성, 접근성 · 공개성	322
173	통일부	통일부 '12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안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18
174	특허청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75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심사 · 심의	이해충돌 가능성	308
176	특허청	산업재산권 판례 성석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339
177	해양경찰청	수난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92
178	해양경찰청	일반 기능 계약직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 지침 개정안		제재규정의 적정성	340
179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81
180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사 · 심의	이해충돌가능성	147
18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59
18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담 · 환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94
183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지원 · 보상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16
18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위임 · 위탁 · 대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33
185	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심사 · 심의	접근성 · 공개성	145
186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재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169
18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재	제재규정의 적정성	234

